

● 제314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우크라이나 민간인 등 인명 살상 중지와
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2. 9. 14.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우크라이나 민간인 등 인명 살상 중지와 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

I. 결의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김원태 의원
- 나. 제안일 : 2022. 8. 29.
- 다. 회부일 : 2022. 9. 02.
- 라. 의안번호 : 9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6개월이 지났으며, 지난 6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군인 및 민간인 사망자가 1만 5천명에 달하고, 665만 명에 이르는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러시아 또한 사망자 4만 5천 명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전쟁은 어떠한 형태이건 용납될 수 없으며, 종식되어야 하며, 어린이와 민간인 등을 포함한 인명 살상은 발생되어서는 안될 비극인 것임.
- 특히, 마이우폴 등을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포격 공습과 기차를 포함한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 학교와 의료·보건·외교·문화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그 피해와 피해의 정도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상태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등 인명살상 중지와 전쟁 종식을 촉구함.

나. 주요내용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양국의 지속적인 인명피해 발생과 피난민의 비인도주의적 환경 노출이 지속되고 있는 바, 전쟁의 참혹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명살상의 즉각 중지와 인도적 지원 및 전쟁 종식을 촉구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1 결의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가 6개월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유엔(UN)이 채택한 결의안(2022년 3월 24일)을 지지하며, 어린이와 민간인 등 무고한 인명 살상 중지, 전쟁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즉각 철수를 통한 전쟁 종식을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음.

2 결의안의 타당성 검토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벌어진 친러 반군과 정부군 간 교전 발발과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가 친서방·나토 가입 정책을 점점 더 확고히 함에 따라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함으로써 발발하였음.
- 러시아는 전쟁의 근본 원인이 미국 등 서방 국가들로 구성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NATO)의 동진’에 따른 자국 안보 위협에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국가 안보’와 ‘세력 균형’을 강조하는 현실주의 관점의 일부 국제정치학자와 지식인들이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¹⁾
-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약소국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희생하며 강대국 러시아의 안보 이익만 고려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동의를 얻기 어려움.

1) “우크라 실질적 나토국 역할 ... 서방 잘못이 러의 침공 불렀다”(최준영, 서울신문, 2022-03-31), “푸틴 탓 아니다’ 美 현실주의자들의 경고”(이교관, 주간조선, 2022-06-18).

- 냉전 해체 후 지속적으로 안보 위협에 노출된 나라는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었으며, 그 원인은 러시아 정부의 권위주의화와 군사 활동 확대에 있음.
- 2차 대전이 종결되던 시점에 알타에서 시도된 동·서 세력권 보장은, 소련이 관할하는 위성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발하는 대중적 저항을 낳았고, 그런 경험이 1989년 이후 동유럽 나라들에서 나토 확장 요구로 이어졌음.
-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법상 전쟁에서도 금지된 민간인 살상을 대규모로 자행하였음.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UN OHCHR)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는 8월말 현재 13,477여 명이고 이들 중 17세 이하 어린이 수는 972명이며, 이들은 대개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러시아 군대의 대포·미사일 공격과 전투기 등을 통한 공습으로 발생하였음.

<표-1> 우크라이나 전쟁 민간인 사상자 현황

(2022년 8월 29일 기준)

구 분	민간인	어린이
사상자	13,477명	972명
사망자	5,587명	362명
부상자	7,890명	610명

- 한편, 대한민국은 과거 근대 국가로의 이행 시기에 주변 강대국의 약탈과 영토 침범에 이은 주권 상실로 고통받았으며, 한국전쟁 시에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남침에 맞서 UN군의 지원을 받아 남한 영토를 수호하였으나, 그 전쟁 과정에서 남한 지역 민간인 사망자만 24만 명 (북한 지역 민간인 사상자 200만 명 추정)이 넘는 비극을 경험한 바 있음.²⁾

²⁾ ‘한국전쟁 피해 통계집’(국방부 국방군사연구소, 1996).

-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왔으며,³⁾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즉각 철수할 것 등을 촉구하는 유엔(UN)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음.
- 국회에서도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바라는 취지에서, 3건의 결의안이 제출되어 있으며,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 연설도 진행하였음(4월 11일).
- 지방의회 단위에서는 제주도의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규탄 및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3월 30일), 세종시의회가 유사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3월 4일), 그 외 서울 도봉구의회, 광주 남구·서구 의회 등이 같은 취지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과 평화를 기원하는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 집회 등의 활동이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펼쳐졌음.
- 이와 같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보편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전쟁 과정에서 국제법이 금지한 대규모의 민간인 사상자를 낳았기에, 서울특별시의회가 한국 정부도 찬성한 유엔 결의안을 지지하며 민간인에 대한 살상 중지와 인도주의적 지원, 러시아 군대의 즉각 철수와 전쟁 종료를 촉구한 것은 서울 시민을 대표해 세계평화와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3)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 정부의 결정”(외교부 보도자료, 2022-02-28).

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 규탄 및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촉구 결의안(조태용 의원 등 24인, 제안일: 2022-02-28),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 행위 규탄 및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홍익표 의원 등 46인, 제안일: 2022-02-28),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불법 침략 행위로 인한 민간인 대학살·강간·고문 등에 대한 반인륜적 인권유린 행위 규탄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촉구 결의안”(양정숙 의원 등 39인, 제안일: 2022-04-13).

3 종합 의견

- 본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6개월을 넘기며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 전쟁이 가져온 대규모의 인명피해 등을 적시하며 러시아의 공격에 따른 민간인 살상 중지와 그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러시아 군대의 즉각 철수를 통한 전쟁 종식을 촉구한 것으로, 서울특별시의회가 전세계인의 우려를 낳고 있는 전쟁에 대해 한국 정부 및 유엔과 뜻을 같이하여 평화와 인권 보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